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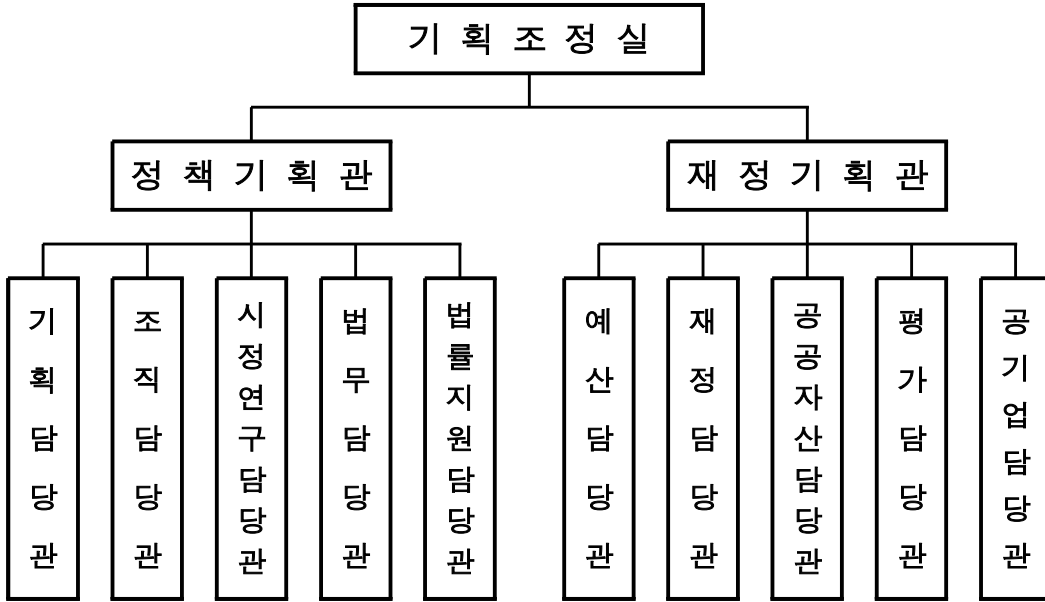
주요 현안보고

2022. 9.

기획조정실

I. 일반 현황

조 직 1실, 2관, 10담당관, 48팀, 1직속기관 · 2출연기관



- 직속기관 : 시립대학교(6처 8대학 10대학원)
- 출연기관 : 서울연구원(1본부 8실 2센터), 서울기술연구원(3본부, 8실, 3센터)

인 력 286명/265명(정원/현원)

(’22. 9. 1.)

구 분	합 계	일반직	임기제	관리운영직
계	286 / 265 (157)	245 / 233	34 / 25	7 / 7
기 획 담 당 관	44 / 40 (18)	33 / 35	9 / 4	2 / 1
조 직 담 당 관	32 / 30 (19)	31 / 28	- / -	1 / 2
시정연구담당관	15 / 15 (9)	15 / 14	- / 1	- / -
법 무 담 당 관	26 / 25 (18)	23 / 22	1 / 1	2 / 2
법률지원담당관	31 / 26 (14)	13 / 11	18 / 14	- / 1
예 산 담 당 관	40 / 39 (24)	38 / 37	1 / 1	1 / 1
재 정 담 당 관	32 / 31 (19)	31 / 30	1 / 1	- / -
공공자산담당관	12 / 11 (4)	10 / 9	2 / 2	- / -
평 가 담 당 관	33 / 28 (18)	32 / 28	- / -	1 / -
공 기 업 담 당 관	21 / 20 (14)	19 / 19	2 / 1	- / -

※ 괄호 안은 여성공무원수

주요기능

구 분	담 당 업 무
기 획 담 당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요 업무계획 수립, 시정 현안사항 기획·조정 ○ 시의회 관련 업무, 국정감사 수감 총괄, 공약 총괄 관리 ○ 시정백서·현황 작성, 정책과제 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등
조 직 담 당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직 및 정원관리,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○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및 지방분권 업무 총괄 조정 ○ 사무이양·위임, 사무위임전결 관련 사항 등
시정연구담당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정연구, 직무발명, 도시경쟁력 평가 사항 ○ 시립대학교 운영의 지도·지원 등
법 무 담 당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, 납세자 보호업무 ○ 자치법규 입안 심사 및 정비,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운영
법률지원담당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시 소송 수행, 법률자문, 계약서 및 위·수탁 협약서 심사 ○ 대시민 법률상담, 공익변호사단 운영 등
예 산 담 당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총괄, 예산집행 관리 총괄 ○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승인,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
재 정 담 당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市·산하기관 통합재정관리, 기금운용 총괄 ○ 재정투자심사, 지방보조금·국고보조금 총괄 등
공공자산담당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공토지자원의 활용성 검토 및 활용계획 수립 ○ 공유재산 위탁개발 및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운영
평 가 담 당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정 주요사업·시책 성과평가 및 조정 ○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○ 주요 시책 공정관리 등
공기업 담당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투자·출연기관 설립·지원, 경영평가, 재정 모니터링 ○ 투자·출연기관 경영혁신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등

예산 총 규모 : 6조 1,562억원

○ 총괄표

(단위 : 백만원 / 기준일 : '22.8.31.)

구분	2021년 최종예산(사업수)	2022년 최종예산(사업수)	증감
합계	3,727,556 (37)	6,156,160 (47)	2,428,604
일반회계	1,558,868 (35)	2,318,582 (44)	759,714
특별회계	206,636 (2)	292,922 (3)	86,286
기금	1,962,052 (-)	3,544,656 (-)	1,582,604

○ 일반회계 : 총 2조 3,186억원

(단위 : 백만원 / 기준일 : '22.8.31.)

구분	2021년 최종예산(사업수)	2022년 최종예산(사업수)	증감
합계	1,558,868 (35)	2,318,582 (44)	759,714
기획담당관	1,017 (2)	1,404 (4)	387
조직담당관	1,293 (3)	1,156 (3)	-137
시정연구담당관	101,586 (8)	131,186 (8)	29,600
법무담당관	1,050 (3)	697 (3)	-353
법률지원담당관	7,596 (2)	7,766 (2)	170
예산담당관	357,017 (3)	258,316 (3)	-98,701
재정담당관	1,086,065 (6)	1,915,131 (13)	829,066
공공자산담당관	- (-)	- (-)	0
평가담당관	2,206 (4)	2,131 (4)	-75
공기업담당관	1,038 (4)	795 (4)	-243

○ 특별회계 : 총 2,929억원

(단위 : 백만원 / 기준일 : '22.8.31.)

구분	2021년 최종예산(사업수)	2022년 최종예산(사업수)	증감
예산담당관	206,268 (-)	292,672 (-)	86,404
공공자산담당관	368 (2)	250 (2)	-118

○ 기금 : 총 3조 5,447억원

(단위 : 백만원 / 기준일 : '22.8.31.)

구분	2021년 최종예산(사업수)	2022년 최종예산(사업수)	증감
합계	1,962,052 (0)	3,544,656 (0)	1,582,604
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	899,261 (-)	1,323,826 (-)	424,565
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계정)	1,062,791 (-)	2,220,830 (-)	1,158,039

※ 사업수는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제외

II. 정책 목표

시민의 삶을 회복하고, 도시경쟁력을 강화

체계적 정책조정 및 시정성과 창출 기반조성

① 안정적 시정성과 창출 지원 및 도시경쟁력 강화

② 시민권의 향상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

③ 효율적인 예산·재정 관리체계 확립

④ 민간위탁 및 공공자산 효율적 관리 기반 마련

III.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보고

1. 인정적 시정성과 창출 지원 및 도시경쟁력 강화

- ① 민선8기 시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공약 관리 추진
- ② 공무원 직접 수행 학술용역 지원 강화
- ③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위원회 정비 추진
- ④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모색

2. 시민권의 향상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

- ① 효율적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법률복지 증진
- ② 법령·제도 개선으로 민생회복 및 시민불편 해소 추진
- ③ 신속·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시민 권익구제 강화
- ④ 정책 신뢰도 향상을 위한 법률 대응체계 구축

3. 효율적인 예산·재정 관리체계 확립

- ①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도모
- ② 시민참여 예산 운영 내실화 추진
- ③ 투자·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
- ④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따른 시행 준비 철저

4. 민간위탁 및 공공자산 효율적 관리 기반 마련

- ① 관리지침 개정으로 민간위탁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
- ② 공공기여 재원의 광역적 활용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
- ③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체계 운영 추진

1. 안정적 시정성과 창출 지원 및 도시경쟁력 강화

① 민선8기 시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공약 관리 추진

② 공무원 직접 수행 학술용역 지원 강화

③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위원회 정비 추진

④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모색

1 민선8기 시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공약관리 추진

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정 신뢰도를 높이고 시정 성과를 창출하고자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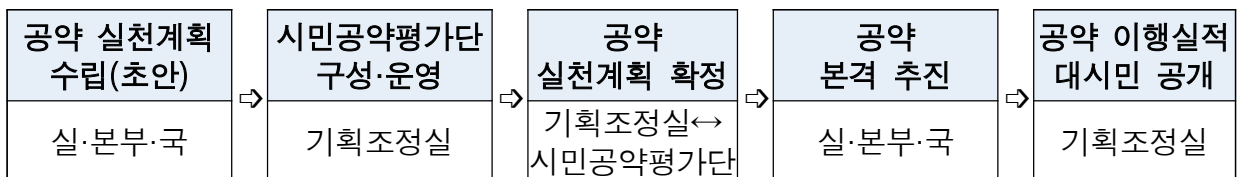
□ 추진방향

- 공약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**공약 이행력 확보**
- 시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**공약 확장 및 발전**

□ 추진내용

- 공약을 정책으로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**공약 실천계획 수립**
 - 연차별 추진계획, 소요예산, 검토과제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- 공약 실천계획의 민주성, 적정성 확보를 위해 **시민공약평가단 구성·운영**
 -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*와 협력하여 인구비례·무작위 추첨을 통해 구성
 - * 매년 시도지사의 공약 이행도를 평가하는 시민단체('05년 설립)
 - 공약실천계획 확정과정에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공약사업의 민주성·효과성 제고
- 시민공약평가단 심의 등을 통해 확정된 계획을 바탕으로 **공약 본격 추진**
 - 반기별로 공약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부진(우려)공약 등은 집중관리 실시

<공약관리 흐름도>



□ 향후계획

- 시민공약평가단 구성 및 운영 : '22.9월~10월
-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확정 및 대시민 공개 : ~'22.10월말
-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평가 준비 : ~'23.3월

2

공무원 직접 수행 학술용역 지원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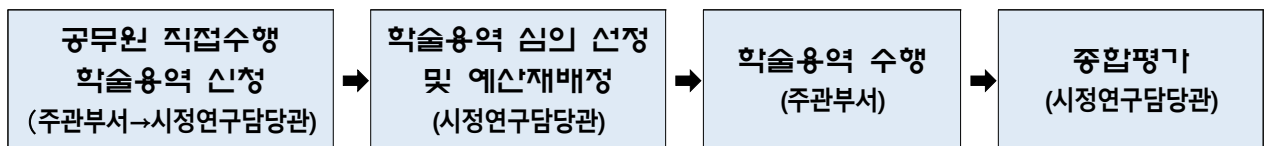
시정운영의 전문성과 조직의 창의성을 높이고 내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연구하는 업무 분위기를 조성함

□ 추진방향

- 시정운영의 전문성 및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지원 확대
- 공무원의 직접 연구용역 수행으로 위탁형 학술용역 최소화 및 예산 절감

□ 추진내용

- 추진절차



-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지원 확대

- 연 1회 선정 ⇒ 수시 선정 ※ 시의성 확보 및 행정환경에 신속적 대응 가능
- 과제별 지원예산 600만원 ⇒ 1,000만원으로 확대
- 학습시간 20시간 ⇒ 25시간 인정

-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지원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확보

- '시정시책연구용역' 연구용역비 중 50,000천원을 예산 변경 활용
※ '22.9월 현재 예산 현액 : 100,452천원

-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('22.9월 기준) 선정 및 지원

- 15개 과제 127,409천원 지원 요구에 대해 11개 과제 71,673천원 지원
※ 최근 3년간('19.~'21.) 실적 : 35건 심의 / 24건 선정, 145,324천원 지원

□ 향후계획

- 연구과제 최종평가 및 성과 보상 : '22.12월

3

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위원회 정비 추진

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폐지, 통폐합 등 지속적 정비 추진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

□ 위원회 현황

- 위원회 및 참여위원 수 : 238개, 5,392명 ('21년말 기준)
- 설치근거별 : 법령 116개(48.7%), 조례 122개(51.3%)

□ 위원회 정비방향

- 위원회 평가를 통해 기능상 실효성이 감소한 **형식적 위원회 정비**
 - 설치 목적 달성 및 여건 변화로 필요성 감소 → 폐지
 - 유사 기능 수행하는 위원회 → 통·폐합
 - 목적·기능상 필요하나 운영실적 저조 → 비상설화
 - 설치 2년 이하 위원회 또는 미개최 1년인 위원회 → 운영 활성화
- 위원회 신설 시, 사전협의 및 일몰제 적용 강화로 **위원회 남설 방지**
 - 신설 수요 발생시, 기존 위원회 활용 및 필요성을 자체 진단, 존속기한(5년내) 명시 원칙

□ 추진상황

- '22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 수립·시행 ('22. 4월)
 - 미개최 29개(12%), 연 1회 개최 36개(15.1%), 위원회별 평균 9.3회 개최
- 정비(폐지, 비상설화)대상 위원회 : 총 14개
 - 폐 지(5개) : 완료 3개*, 조례개정 준비 중 2개
 - * 경제민주화위원회('22.1월), 생활문화협치위원회('22.3월), 기후변화대책위원회('22.7월)
 - 비상설화(10개) : 법령개정 건의 5개*(→ 행안부, '22.8), 조례개정 준비 중 6개
 - ※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성·기능을 재검토해 정비대상 추가 발굴 : ~'22.9월
- 운영실적 저조 위원회(51개) : 운영활성화 계획 제출('22. 5월)

□ 향후계획

- 실·본부·국별 정비대상 위원회 추가발굴 및 정비계획 제출 : '22.9월까지

4

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모색

글로벌 도시경쟁력 평가 지표에 대한 분석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함

□ 추진방향

- 도시경쟁력 지표 관리(기조실)와 평가지수 분석·연구(서울연) 기능 간 협업
- 분야별 전문가 중심 글로벌 도시경쟁력 이슈 및 정책 논의 네트워크 구축
-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위한 도시 지표 및 시정성과 체계적 관리

□ 추진내용

- 국제 도시경쟁력 평가지수별 서울시 평가 현황 및 강약점 분석
 - 서울연구원을 통한 경쟁력 평가 분석, 대응 전략 마련 등 연구·분석 강화
 - 서울의 도시경쟁력 진단 및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 실시('21.4.)
- 「도시경쟁력 포럼」 운영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전략 논의
 - 전문가 기반의 시정발전 및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논의 네트워크로서 市 연구기관(서울연·기술연·시립대)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('22.9월 기준, 총 3회)
-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 지표 및 시정성과의 체계적 관리
 - 평가지표 관련 영문 데이터 현행화 및 市 영문홈페이지 내 공개('22.7.)
 - 市에서 관리 가능한 평가지수별 지표 추출 및 관련 시정성과 관리 추진(~'22.9.)
 - 국제 평가기구 대상 市 도시지표 개선 현황 및 시정성과의 영문자료 공유

□ 향후계획

- 도시지표별 시정성과 정리 및 국제 평가기관 제공 : '22.9월
- 제4차 도시경쟁력 포럼 개최 : '22.11월

2.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

① 효율적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법률복지 증진

② 법령·제도 개선으로 민생회복 및 시민불편 해소 추진

③ 신속·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시민 권익구제 강화

④ 정책 신뢰도 향상을 위한 법률 대응체계 구축

1 효율적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법률복지 증진

법률상담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대시민 법률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로 서울시민의 법률복지를 증진하고 권익향상을 도모함

□ 추진방향

- 생활 주변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상담이 가능토록 방안 마련
- 법률서비스 인적 기반의 효과적 관리를 통한 정책의 안정성 확보

□ 추진내용

- 전화 및 방문 상담 병행으로 법률서비스의 효율성·편의성 제고
 -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마을변호사·법무사 상담 시 동주민센터 방문 상담 원칙(전화상담도 병행) 재개('22.5.23.)

[2022년 상담방식 변경에 따른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현황]

구분	'22.1.~5. (상담방식 전환 전)	'22.6.~ (상담방식 전환 후)
방문 상담	월 평균 76건 (8%)	월 평균 579건 (49.1%)
전화 상담	월 평균 978건 (92%)	월 평균 600건 (50.9%)

- 마을변호사·법무사 제도 만족도 조사로 상담 품질 향상 기반 조성
 - 만족도 주요 조사 항목(상담 신청과정·이용 편의성·상담 및 응대) 구성 후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개시
 -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모색 후 이를 운영 방침에 반영
- 공익변호사 풀(pool) 적정 규모 유지 및 마을변호사 활동 유공자 표창
 - 공익변호사단의 일정 규모 유지(약 1,000명)로 마을변호사 결원 동주민센터 발생 시 신속한 충원으로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제고
 - 우수변호사에게 표창장 수여로 자긍심 고취로 법률서비스 향상 기대

□ 향후계획

- 마을변호사·법무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: '22.9월
- 마을변호사 유공자 표창장 수여 : '22.12월

2

법령·제도 개선으로 민생회복 및 시민불편 해소 추진

시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경험하는 각종 법령·제도상 불편사항을 발굴·개선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

□ 추진방향

- 시민생활과 밀접한 불합리한 법령·제도 발굴 및 개선
- 발굴·개선 내용 대정부 및 국회 건의를 통한 신속한 개선 추진

□ 추진내용

- 경제·주택·복지 등 시정 전 분야의 법령·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건의
 - 실·본부국, 투자출연기관, 자치구와 함께 총 103건 발굴, 대정부·국회 등에 건의

'22년 주요 개선사례
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('22.6.) : 정비사업 종료 후 고의적인 조합 해산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고시 후 1년 내 조합 해산총회 소집 규정 및 정당한 사유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 취소 규정 신설
-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('22.7.) : 중대건설사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함에도 행정처분권한이 시·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어서 적기에 적정 수준으로 처분하기 어려우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 할 수 있도록 위임대상에서 제외

○ 다양한 건의 창구를 활용한 개선과제 수용률 제고

- 국무·차관회의, 시·도지사협의회, 국회 등을 통해 주요 안건 개선 노력
- 국무조정실, 행정안전부와 협업 및 지속적 건의로 회신율·수용률 향상

□ 향후계획

- 하반기 법령·제도 등 개선과제 발굴·건의 : '22.9월, 12월
- 주요 이슈별 개선과제 집중 발굴·건의 : 연중 수시

3

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실질적 시민 권익구제 강화

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·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침해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 제고함

□ 행정심판위원회 개요

- 심판위원: 정원 50명/현원 42명(외부 37명, 내부 5명)
- 회의운영: 연간 24회 개최(매월 2회)

행정심판 운영 실적 (’22.8.31.기준, 단위: 건)	접수건수	재결건수	인용	기각	각하
	611	491	79(16.1%)	308(62.7%)	104(21.2%)

□ 추진내용

- 정확한 사건 실체 파악 및 신중한 재결을 위한 **구술심리 비율 확대**
 - 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민 권익구제 향상 도모
 - ※ 최근 3년간 구술심리 운영현황 : 3.9%(’20) → 4.7%(’21) → 6.5%(8.31.기준)
- 고난도 사건의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한 **주심배정 비율 확대**
 -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하고 복잡한 청구사건 증가로 주심배정 필요성 증대
 - ※ 최근 3년간 주심 배정 비율 : 36%(’20) → 56%(’21) → 59.7%(8.31.기준)
- 사회·경제적 약자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**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추진**
 - 국선대리인 선정 기준 확대(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가능)와 홍보 실시
 - ※ 국선대리인 신청/선임현황 : 16건/4건(25%)(’21) → 16건/15건(93%)(8.31.기준)

□ 향후계획

- 행정심판 사례전파 및 재결레집 제작 : ’22. 11월

4

정책 신뢰도 향상을 위한 법률 대응체계 구축

단계별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각종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정책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보완하여 시정 신뢰도를 제고함

□ 추진방향

① 사전 법률 자문

시정 현안 수행 관련, 법률 전문가의 사전 법률지원

② 계약·협약 검토

주요 계약 및 협약의 법률·재무적 적정성 관리

③ 소송 수행 관리

소송 업무 통합을 통한 소송체계 전문화

□ 추진내용

○ 정책수립 단계부터 **사전 법률 자문**을 거쳐 업무수행의 **적법성** 제고

- 시정현안* 중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정책 수립부터 법률자문 지원
 - * 중대재해처벌법 시행('22.1.27.) : 전담 TF 설치로 신속한 법률대응체계 마련
- 추진실적('22. 7월 기준) : 총 446건(내부 221건, 외부 225건)
 - ※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실적('22.7월 기준) : 총 40건(내부 25건, 외부 15건)

○ **계약·협약** 초기 검토 단계부터 참여하여 대응 전략 등 **선제적 지원**

- 협상 단계부터 계약 및 협약에 대한 행정적 및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적·재무적 사전검토 수행
 - ※ MOU 사전점검용 매뉴얼(체크리스트) 개정('21.3월) 및 분기별 배포

○ 소송업무의 통합 수행으로 **전문성 강화** 및 **체계적 관리**

- 법률지원담당관 소속 법률전문인력이 市 소송수행 전담하여 체계적 대응
- 추진실적('22. 7월 기준) : 1,136건 소송수행(239건 종결), 승소율 78.2%

□ 향후계획

- 소송수행 지속추진 및 소송사무규칙 개정 : '22년 하반기
- 시정 주요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: 연중 상시

3. 효율적인 예산 · 재정 관리체계 확립

①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도모

② 시민참여 예산 운용 내실화 추진

③ 투자 · 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

④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따른 시행 준비 철저

1

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도모

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예산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재정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

□ 제도개념

- 사업부서가 매년 자체적으로 전년도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그 결과를 확인·점검하여 차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

□ 추진근거

- 『지방재정법』 제5조 제3항, 동법 시행령 제1조의2(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영)
- 『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』 (행정안전부예규 제132호)

□ 평가개요

○ 평가대상 및 절차

- 사전심사 : '23년 신규 행사성 사업
 - ▶ 예비심사(예산담당관) → 민간위원회 심사·확정 → 예산반영
- 사후평가 : '21년 5억 이상 투자경상사업, 행사성 사업 등 595개 사업
 - ▶ 자체평가(사업부서) → 외부평가(한국행정연구원) → 예산반영

○ 평가활용

- 사전심사 : 적정 및 조건부 적정 사업에 한하여 '23년 예산편성
- 사후평가 : 평가결과에 따라 '23년 예산편성에 반영

평가등급	사업비율(사업 수 기준)	예산상 조치
매우 우수	20% 이내	원칙상 예산 증액 또는 유지
우수		
보통	-	원칙상 예산 유지
미흡	15% 이상	원칙상 예산 10% 이상 삭감
매우 미흡		재평가 후 개선 없을 시 사업 일몰

- ▶ 단, 예산 삭감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'성과관리 개선계획' 수립

□ 향후계획

-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(민간위원회 개최) : '22.10월
- 평가결과 확정 및 '23년 예산반영 : '22.10월

2

시민참여예산 운영 내실화 추진

시민이 市 사업을 직접 제안·심사·선정하는 '시민참여예산' 운영을 내실화하여 예산편성과정의 시민참여 확대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·신뢰성 향상에 기여

□ 사업개요

- 추진근거 :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), 「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
- 추진내용 :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이 직접 심사·선정하여 예산으로 편성
- '22년 시민참여예산 편성규모 : 246억원

구 분	계	광역 단위		지역 단위
		광역제안형	민주주의서울제안형	구단위계획형
사업수	197건	14건	2건	181건
금액	246.4억원	79.6억원	10.1억원	156.7억원

※ '22년 자치구 자체편성 시민참여예산 : 418억원(25개 자치구별 평균 16.7억원)

□ '22년 주요 개선 내용

기 존 ('21년 편성, '22년 집행)			개 선 ('22년 편성, '23년 집행)		
제 안 형	광역 단위	광역제안형	광역 단위	기획제안형 (서울시 운영)	
		민주주의서울 제안형			
	지역 단위	구단위계획형	지역 단위	자치구 자율 운영	
		동단위계획형			

-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은 **광역단위 「기획제안형」 사업으로 단일화 운영**
 - 유형간 유사·중복 소지 제거, 시민관심이 높고 제안이 용이한 사업주제 선정
- **지역단위 시민참여예산은 자치구 책임하에 자율적 운영**
 - 시·구 시민참여예산제도 간 예산중복 해소, 자치구 상황에 맞게 자율 운영
- 시민참여예산 **운영기구 간소화**를 통한 **절차 운영의 효율화**
 - 조례상 필수 운영기구(시민참여예산위원회,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) 중심으로 운영 간소화

□ '23년 시민참여예산(기획제안형) 추진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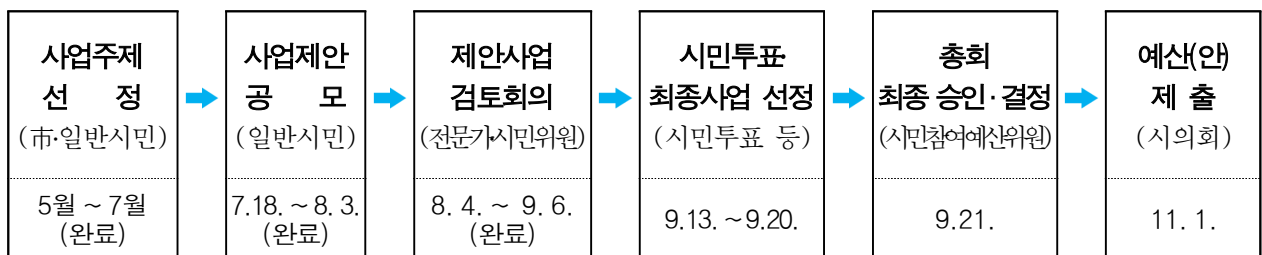
- 사업주제 : 시민관심이 높고 사업제안이 용이한 주제 선정
 - '21년 시민제안 분석,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3개 주제 선정

< '22년 시민제안 공모 사업주제 >

연번	분야	사업주제
1	교통	교통 약자(장애인, 노인, 아동)와 함께 동행하는 도시 만들기 - 장애인, 노인, 어린이를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여건 조성
2	건강	사회적 약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도시 만들기 - 청년, 노약자, 은둔 청년 사회적응 및 복귀 지원
3	환경	시민일상 속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도시 만들기 - 쓰레기 배출 절감, 재활용 촉진, 미세먼지 예방 등

-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현황(7. 18. ~ 8. 3.) : 총 472건 접수 (3,472억원)

- 추진절차 : 사업 주제별 시민 제안사업에 대한 **전문가·시민위원 검토**
및 **시민투표**를 통하여 **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**



□ 향후계획

- 시민투표·최종사업 선정 : '22. 9. 13. ~ 9. 20.
- 시민참여예산 '총회' 개최 : '22. 9. 21.
- 시민참여예산(안) 시의회 제출 : '22. 11. 1.

3

투자 · 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

비효율적 운영 및 성과저조기관 등에 대한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투자출연기관 운영 효율화를 도모함

□ 추진배경

- (지속 증가로 비대화) 지난 10년간, 기관 신설 및 인원 증원 등 지속 확대

'11. 12. 31. 17개 기관 • 정원 : 19,482명	⇒	'21. 12. 31. 26개 기관 • 정원 : 29,149명	※ 신설기관 : 총10개(※교통공사 통합으로 순증 9개) - 에너지공사, 물재생시설공단, 평생교육진흥원, 50플러스재단, 디지털재단, 120다산콜, 공공보건의료, 기술연구원, 사회서비스원, 미디어재단TBS
--	---	--	--

- (외부 지적) 시의회, 언론, 감사위원회 등 기능중복에 대한 지속 개선 요구
- 진행 중인 경영효율화 용역('21.10월 ~ '22.10월)을 토대로 경영혁신 구체화

□ 추진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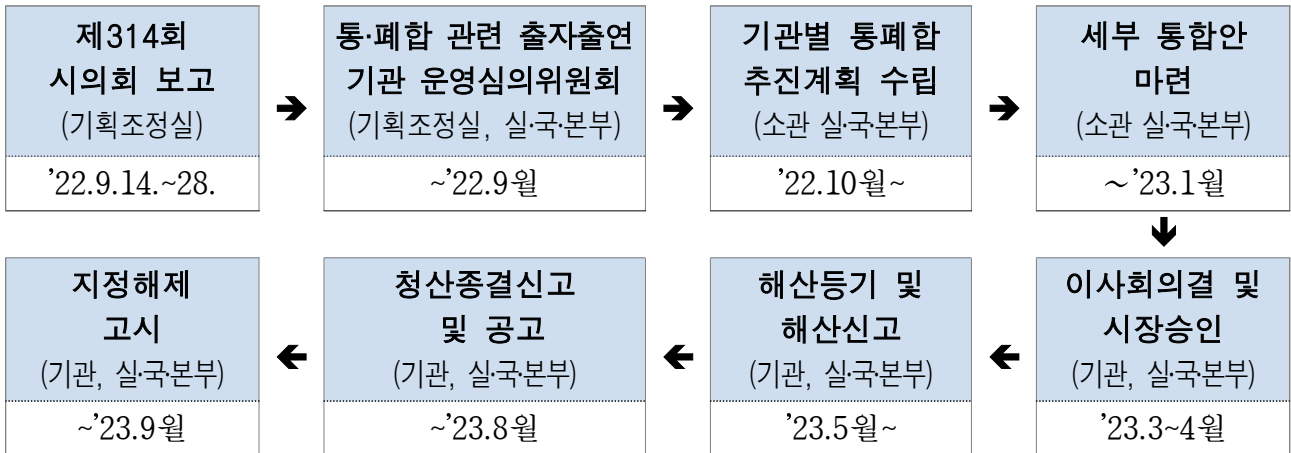
- 유사·중복기능 기관은 경영효율화 용역내용을 기초로 통·폐합 방안을 마련하여 기관의 비효율성 등을 해소
-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재구조화 및 비효율적 운영 정상화 추진

□ 추진계획

1. 기관 통폐합 검토 - 내외부 논의로 재구조화 방안 도출

- 유사·중복 기능 해소, 통합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검토 추진
- 검토대상 : 기술연구원 · 서울연구원 / 공공보건의료재단 · 서울의료원 / 50플러스재단 · 평생교육진흥원
- 출자·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등 내외부 논의과정을 거쳐 최적의 기관 재구조화 방안 도출

< 추진 절차(안) >



※ 기관별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및 조정 가능

2. 기능 재구조화 및 운영 정상화 - 기관장 주도 자발적 혁신 유도

○ 투자출연기관 정원 관리 강화

- 기관별 수요 감소 및 기능 쇠퇴 분야 인력을 신규 수요 및 시정 핵심 과제 대응 등 분야로 재배치 활용

○ 시정역점사업 실행을 위한 사업 재구조화

- 1개 조직·사무 신설시, 1개 이상 조직·사무 폐지하는 등 강화된 조직관리
- 시의성이 낮아진 조직·사무나 유사·중복사업 등은 축소·폐지하고, 약자와의 동행 등 시정 역점사업에 부합하는 사업 신설·강화

○ 경영평가 및 기관장 성과계약 지표개선 등으로 자발적 혁신 유도

- 공통지표 간소화 및 사업지표에 기관 현안사항을 포함하도록 지표 개선
- 투자출연기관의 기관 현안 해결에 대한 기관장의 동기 부여를 위하여 성과계약 내 혁신성과 지표 신설

□ 추진일정

- 경영혁신 추진계획 및 통합설계안 마련 : '22.9월~'23.1월
- 이사회 의결 및 해산신고 등 통·폐합 절차 : '23.2월~9월
- '23년도 경영평가('22년 실적) 방침 수립 및 시행 : '22.12월~

4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따른 시행 준비 철저

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시행('23. 1. 1.)을 대비하여 조례 제정 및 답례품 선정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차질없이 준비하고자 함

□ 추진방향

- 개인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통해 지자체 재정확충에 기여
-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답례품 선정으로 지역 산업 활성화 도모

〈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〉

- 추진근거 :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('21. 10. 19. 제정) 및 시행령
- 주요내용 : (개인)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 / (지자체) 복리증진사업에 활용
 - 기부금의 10만원까지 100% 세액공제, 10만원 초과 시 16.5% 세액공제
 - 기부금은 개인별 연간 최대 500만원(법인·단체 기부 불가), 30% 내 답례품 제공

□ 추진내용

- 「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 준비
 -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」의 조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답례품 종류 및 선정위원회 구성, 고향사랑기금 설치·운용 등 규정
 - ※ 입법예고(9. 8.~ 9. 28.), 조례규칙심의회(10.13.), 시의회 제출(10.17.)
- 「고향사랑 기부제 인식 조사」 (8~9월)로 기부 수요 사전 파악
 - 기부 참여의사, 예상 기부금 규모, 선호 답례품 등 타 시도 주민 인식조사
 - ※ 전국 총 1,300명 대상 웹조사(서울시민 제외, 지역·연령·성별 고려하여 비례 할당)

□ 향후계획(안)

- 고향사랑 기부제 기본계획 수립 : '22. 10월
-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 제정 : ~'22. 12월
-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답례품 선정 : '23. 1월
- 고향사랑 기부제 본격 추진 : '23. 1월 ~

4. 민간위탁 및 공공자산 효율적 관리 기반 마련

① 관리지침 개정으로 민간위탁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

② 공공기여 재원의 광역적 활용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

③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체계 운영 추진

1

관리지침 개정으로 민간위탁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

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 및 운영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함

□ 개정방향

- 수탁기관 채용 공정성 확보방안 및 조례 등 개정사항 반영
- 민간위탁 사무 운영에 대한 관리·감독 강화로 민간위탁 책임성 제고
- 민간위탁 제도의 체계화로 민간위탁 사무 관리 효율성 제고

□ 주요 개정내용

- 채용 공정성 확보방안('22.6월) 및 민간위탁 조례 개정사항('21.12월) 반영
 - 시설장 등의 가족채용 제한 신설, 채용심사위원 제척·기피·회피 사유 구체화 등
 - ※ 채용 매뉴얼을 포함한 인사·노무 분야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이수 의무화
 - 재위탁 시 시의회 보고(단, 6년 경과시 동의)에서 매년 시의회 동의로 변경
- 위탁사무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수탁기관 사전점검 의무화
 - 위탁기간 전체 대상 '비전 - 중장기 성과목표 - 연도별 사업목표' 수립 및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확정토록 제도화
 - ※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전 컨설팅 실시
 - 지도점검 2주 전까지 수탁기관 자체점검 실시 및 시정, 주관부서에 결과 통보
-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공정성 강화 및 평가 기준 개선
 -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 참여 제한 사유 구체화*로 이해충돌 사전 예방
 - * 심의대상 기관 관련 ▲ 가족관계, ▲ 용역 등으로 직접 관여, ▲ 3년 이내 재직한 경우
 - 중복 지표 폐지 및 유사 지표 통폐합 등 수탁기관 선정 가점 기준 합리화

□ 향후계획

- 개정 민간위탁 관리지침 안내(조직담당관→주관부서 및 수탁기관) : '22. 8월
- 온라인 교육콘텐츠(인재개발원 '민간위탁사업 실무') 개정사항 반영 : '22. 9월

2

공공기여 재원의 광역적 활용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

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법령·조례 개정이 완료*되어, 제도 본격 시행을 위한 합리적 관리·운영기준 수립 등 실행방안을 마련함

* 공공기여 자원 광역적 실행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('21.12.30.)

□ 추진방향

- (운영기준) 합리적 계획기준, 안정적 기금확보, 대상사업 결정기준 등 실행방안
- (관리방안) 연차지역별 비용확보 대상사업 관리 및 기금 활용사업 지속 발굴

□ 주요내용

- 공공기여 자원 활용을 위한 **합리적 관리·운영기준 수립**
 - (적용기준) 구체적 개발계획과 공공기여 계획을 사전협의한 경우를 대상
 - (납부기준) 분할납부, 현금납부액 등을 포함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 협약체결
 - (사용기준)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시설 등의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우선사용
 - (선정기준) 기금 활용사업 선정을 위한 정책회의 운영
- 재원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한 **기금 설치 및 제도·운영 일원화**
 - (현행) ‘기반시설설치기금’ 조례(미래공간기획관)
 - (개정) [가칭] ‘공공자산운용기금’ 조례(기획조정실)
- 제도운영에 대한 **지속적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 확대방안 마련**

□ 향후계획

- 세부 운영기준 확정 : '22. 9월 ~ 12월
- 기금 조례 개정 추진 : '22. 12월 ~

3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체계 운영 추진

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합리적 통합관리(제도·계획-발굴·관리-활용의 일원화)로 시책에 필요한 지역별 시설을 도입하고자 함

□ 추진방향

- 사회적 여건 변화 등 다양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설 적기적소 공급
- 효율적인 기부채납 시설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관리체계 마련

□ 추진내용

- 법령·기준 등 운용 및 도시계획에 기반한 **적정 공공기여 계획**
 - 기부채납 관련 ‘국토계획법’, ‘도시계획 조례’ 및 ‘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’ 등 관련 기준 운용
 -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기여 계획 사전검토 및 논의
- 기부채납 공공시설 **적극 발굴 및 적정 시설 매칭**
 - 도시계획업무시스템(UPLIS)을 활용하여 市(실·본부·국)와 區 필요시설 상시 조사·발굴하고, 사전수요 없을 시 안전별로 수요조사 시행
 - 지역 여건·특성 및 구체적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시설 매칭
- 설계~공사~준공 이후까지 **지속적 관리 및 모니터링**
 - 기부채납 통합관리부서 주관으로 준공 시까지 민·관 실무협의회 추진
 - 기부채납 공공시설 운영 성능 최종 확인 및 사후 모니터링

□ 향후계획

- 기부채납 통합관리·운영 추진(지속) : '22. 8월 ~
- 기부채납 공공시설 조사·발굴 및 실무협의회 운영 : 연중 상시